

보도설명자료

(‘12. 11. 21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‘고준위 핵폐기물’ 차기정부로 떠넘기는 MB정부
(‘12. 11. 21, 한겨레)

1. 기사내용

- 한겨레는 사용후핵연료 관리문제에 대해 현 정부가 5년 가까이 의견수렴만 했을 뿐 뚜렷한 처리계획을 내놓지 못해서 현 정부의 원전 정책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보도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전 세계적으로도 사회적 갈등이 첨예한 사안으로 관리대책 마련까지는 장기간이 소요되며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임
 - 공론화를 위해 공론화방안마련(‘07-08), 공론화법적근거마련(‘09), 원자력 전문가 관리방안연구(‘10-‘11), 정책포럼 운영(‘12) 등을 통해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옴
 - 참고로 프랑스는 공론화(9개월) 이전에 관리방안마련 및 연구에 15년을 소요했으며, 캐나다(공론화 3년)는 10년을 소요한 바 있음
- 또한 동 사안은 대표적인 사회적 갈등 과제로서 대책 마련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국민적 신뢰 확보를 위해 정부 변화에 관계없이 일관되고 책임있는 정책기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이번 발표를 하게 됨

※ 관련 문의

지식경제부 방사성폐기물과 김정화 과 장 (02-2110-5531)

남철기 사무관 (02-2110-5536)